공장·식당·가정 정전피해 아우성

정부 보상발표에 "신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피해 산정 애매하고 실태파악 손놔 분통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로 광주·전남 지역 90여만 가구에 단전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업체, 영세상인 등의 조업·영업차질로 인한 직·간접 피해액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전사태를 촉발한 한전은 물론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 마저도 피해실태 파악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이 하소연할 곳도 없는 지경이다. 정부가 피해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피해 인정 범위를 놓고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현장, 영세상인 피해호소 줄이어=18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35분께부터 8시까지 광주·전남 전지역에서 전기 공급이 30분씩 순차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90여만 가구의 전원이 차단됐다.

문제는 지역 산업·조업현장, 영세상인들의 크고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지역 중소업체 등에 따르면 정전사태로 광주시 남구 송암산업단지 내 63개 자동차 정비업체의 조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자동차 정비 장비 등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자동차 정기검사, 수리업무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간 당 5~6대 차량을 정기검사하는 데 정전으로 무려 3시간 가량 일을 못했다"며 "대당 5만원에 달하는 차량 검사비 등 수입도 수입이지만 신용하락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나주의 한 식품회사에서는 30여분 동안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생산공정에 차질이 생겨 제품이 불량처리됐으며, 순천의 약품생산 업체도 생산물량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실정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소공급장치가 작동 중단되면서 어류가 폐사한 양식장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당, 슈퍼마켓, PC방 등의 영업손실이 속출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구 풍암동의 한 슈퍼마켓 업주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피해상황을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뒤늦은 보상책 신뢰 잃어=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번 정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 김모(56)씨는 "정부가 피해보상에 나선다고 하지만 피해실태 조사로 미적거리는 마당에 언제 보상이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정쩡한 보상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당초 이번 사태에 대해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과 지식경제부 등 당국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누리꾼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 정전을 실시한 한국전력 측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경우 피해보상액이 800원에 그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공간은 냉소로 가득찼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FIRA 코리아컵 로봇 축구대회 1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열린 '2011 FIRA 코리아컵 로봇 축구대회'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볼을 다투는 로봇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 중 하나인 이들 로봇은 사람의 조작이 아닌, 인공지능에 따라 작동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벽 원룸서 20대 女 흉기 피살

18일 광주 광산구서

광주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원룸 2층에 사는 박모(여·29)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동거인 K(2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상·하의 모두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점과 수 차례 흉기에 찔린 점으로 미뤄 누군가 침입해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세대 응원단 "슨상님…" 전라도 비하

고연전 앞두고 현수막 내걸어
네티즌들 항의에 철거 사과

'사학 라이벌'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고연전을 앞두고 연세대 응원단이 전라도를 비하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거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응원단 '아카라카'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정문 사이 도로에 문제의 현수막을 쳤다.

왕복 2차로인 연세로를 가로질러 내걸린 이 현수막에는 연세대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오오미 슨상님 시방 고대라 하셨소?'라고 적혀 있었다.

'오오미'는 전라도 사투리인 감탄사 '오메'를 희화화한 표현이고 '슨상님'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전라도 사람들의 호칭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한 것으로, 둘 다 인터넷 공간에서 호남을 비하할 때 쓰인다.

토요일 오후 신촌 한복판에 이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리자 연세대 동문들은 "응원단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같은 학교 학생인 게 부끄럽다"며 잇따라 항의했고 결국 연세대 응원단은 두 시간만인 오후 4시께 현수막을 내렸다.

연세대 응원단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연고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용구와 인터넷 용어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가 발생했다.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올해 정기 고연전은 오는 23~24일 잠실종합운동장 등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양과동 폐기장 정직한 감사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감사〈광주일보 9월6일 7면〉와 관련 주민 대책위원회는 "정직한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최근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며 "남구청의 건축허가가 잘못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실수로 포장,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눈앞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더 큰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 남구는 지난 2009년 8월~11월 사이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과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잇따라 내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5·18 보훈급여 받으려면 이미 받은 보상금 반환"

故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 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혈사태 확산방지에 노력한 고(故)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의 유족이 보상금 중복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8일 안 전 국장의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게 될 보훈급여금은 안 전 국장이 5·18과 관련해 사망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며 "유족 중 선순위자로 부인이 보훈급여를 받으려면 유족은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안 전 국장이 숨진 뒤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830만원만 지급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997년 대법원에서 9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이 2006년 8월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되면서 부인은 이를 근거로 보훈급여를 청구했으나 기존 보상금을 반환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국장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5·18 당시 경찰관들에게 시위군중에 대해 과잉진압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위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됐으며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혹독한 심문을 받고 강제로 사표를 낸 뒤 석방됐지만 그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1988년 숨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경찰, 사건조작 최다 오명

신학용 의원 국감자료, 전국 13명중 5명 차지

지난 4년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조작하다가 적발된 광주경찰관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다 수치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각종 범죄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2008년에 230명, 2009년 239명, 2010년 163명, 올 들어서는 7월까지 99명이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각각 132명, 48명, 전북 32명, 광주·전남청이 각각 29명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이중 13명은 범인 바꿔치기,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중인 사건을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광주경찰청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례는 2008년 6명, 2009년 3명, 지난해 0명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올해 들어 7월까지만 4명이 나타나 고질병이 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경찰관의 사건 조작은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수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또 말벌에…

순천서 40대 사망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께 순천시 월등면 월용리 신성 마을 인근 백모(70)씨의 매실 밭에서 성모(42·순천시 황전면)씨가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

발견자 백씨는 "성씨 등 작업 인부 2명을 데리고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성씨가 말벌에 쏘인 뒤 쓰러졌다"고 말했다. 성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성씨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정전 이유가 뭐냐" 컴퓨터 등 던져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정전사태에 항의하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물을 부순 이모(3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직원 박모(35)씨에게 "정전된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정수기·컴퓨터·모니터 등을 집어던진 혐의.

○…경찰은 "이씨가 전날(15일) 갑작스럽게 정전된 사실에 너무 화가나 항의하려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D-day 100일 출제유형을 잡아야 합격이 가까워진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 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 (대학별 출제경향 완전정복)
자연계열 편입합격 열쇠, 지방유일 실강의
편입수학 - 공학수학 이론/문풀
2013 편입영어 첫걸음
편입영어 (왕초보를 위한 문법/ 어휘이론)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0월 4일